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3 -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나19258(본소) 손해배상(기)

2023나51214(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박정은

서울 종로구 종로54길 25, 4층 (창신동)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 10, 4층, 5층 (반포동)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하대원

부산 부산진구 서면로 10, 2416호 (부전동, 서면데시앙스튜디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펌나무

담당변호사 권영우, 이승현, 이윤정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문윤식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23. 선고 2021가단5304895 판결

변 론 종 결 2023. 9. 15.

판 결 선 고 2023. 11. 17.

주 문

1. 이 법원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과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본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원인의 일부(본소 부분 라.항)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서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 유

1. 반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1. 5. 4.부터 같은 해 5. 18.까지 4차례 피고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조롱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항소심에서의 반소는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에 의하여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는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므1051(본소), 1068(반소)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06850(본소), 106867(반소)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법원에서 제기된 반소에 대하여 부동의하였고, 반소의 청구원인에 관하여 제1심에서 심리된 바 없으므로 반소청구는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한다. 따라서 반소는 부적법하다.

2. 본소청구에 관하여

가. 2021. 3. 27.자 준강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21. 3. 27. 원고의 스튜디오 사무실 내부 휴게실에서 원고의 만취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원고가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와 피고가 2021. 3. 27.경 원고의 사무실 내 휴게실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2021. 4. 18.자 강제적 성관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21. 4. 18. 피고의 집에서 원고가 원하지 않은 강제적인 성관계를 실행하고 원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질 내에 사정을 하여 원고는 산부인과에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2021. 4. 18.경 피고의 집에서 원고와 성관계를 가지던 중 원고의 질 내에 사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3호증(92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당시 원고의 동의 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원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질 내에 사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가 2023. 3. 21. 접수시킨 녹취록, 갑13호증을 보태어 보아도 같다).

다. 2021. 6. 28.자 강제적인 성관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21. 6. 28. 원고가 원하지 않은 강제적인 성관계를 하여 원고는 질 내 출혈로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와 피고가 2021. 6. 28.경 피고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그로부터 1개월 후인 2021. 7. 27.부터 자궁 및 질 출혈로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갑5호증, 원고가 작성한 갑10호증과 을3호증만으로는 피고가 같은 해 6. 28. 강제로 원고와 성관계를 하였거나 원고에게 당시 질 내 출혈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가 2023. 3. 21. 접수시킨 녹취록, 갑14호증을 보태어 보아도 같다).

라. 피고의 2023. 1. 27.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23. 1. 27. '무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라는 죄명으로 원고를 무고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24호증, 을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3. 1. 7. 경남창원중부경찰서에 ① 원고가 2021. 8. 2. 서울혜화경찰서에 '2021. 3. 27. 피고로부터 강간당하였다'라며 피고를 무고하였고, ② 원고가 2021. 5. 4.부터 같은 달 18.까지 피고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고소한 사실, 그 결과 위 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은 2023. 6. 2. 불송치 결정(증거 불충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위 고소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반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본소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석준협

석준협

판사

노호성

노호성

판사

양환승

양환승

정본입니다.

2023.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 이현재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